

“투명·공정 청문회 진행 최선”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대상
내달 3일 청문회 실시

수행능력 및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 투명하고 공정한 청문회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오는 6월 3일, 1

차 도덕성 검증(비공개)과 2차 업무능력 검증(공개)로 나뉘어 실시되며, 1문1답(의원 1명당 질의시간 15분)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6월 5일,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장에 검토를 거쳐 8일까지 의장이 도지사에게 청문 결과를 송부한다. /김진성 기자



이투 벗고... 넥타이 풀고... 워크숍 경험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7일 간담회를 갖고 전북도가 요청한 전북 문화관광재단 이기정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월 3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도의회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의원 8명과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 등 모두 11명으로 인사청문회위원을 구성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전검증을 위해 도덕성 및 전문성, 업무능력 검증 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서면 요구자료를 토대로 추가자료 요구 여부 등 청문회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자리는 작년 12월 이후 약 5개월 가량 공석이었으며, 그동안 총 3차례 걸쳐서 공모가 진행될 정도로 대표이사 선임 문제가 순탄하지 않았다.

이에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리더십과 정책비전, 경영능력을 비롯한 정책

민주 “상임위원장 18석 전석 가져와야”

이해찬 “관행 근거로 21대 국회도 20대처럼 만들지 말아야”
박광온 “안정적 과반 차지... 전 상임위원장 표결 선출도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원구성 관련,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177석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만큼 전체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선거 당시 180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이 무뎠던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여야 의석은 (여당이)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이라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원구성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대표단에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18석 전석을 차지하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으면) 21

대 국회를 절대 과반으로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최고위) 강력한 지적이 있었다”며 “원내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11대7로 나눠 갖는 것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당이) 아직도 과거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7개가 자신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어제 협상에서 그런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그건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 주장을 “잘못된 관행”으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는 잘못된 관행과 얼룩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20대 국회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관행을 근거

로 21대 국회도 유사 20대 국회로 만들려고 하는 야당의 주장과 논리, 행태에 대해 당 입장에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국회를 운영하는 데 과반의석과 안정적 과반 의석을 분리해서 쓴다”며 “과반은 본회의 안건 표결 시 300명이 모두 출석했을 때 통과를 위한 151석이고, 안정적 과반은 모든 상임위 표결 시 과반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안정적 과반이라고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도 준 거다. 대화·타협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당연히 하라는 게 민의”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국회는 180석을 민주당에 몰아줬다.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원내대표단은 국민의 뜻을 정확히 헤아려 야당과 협상하고, 야당의 이해가 부족할 때는 전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할 수 있다는 각오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도시재생으로 새암로 탈바꿈 시도

민주 윤준병 당선인, 답답했던 지역문제 해결 발 벗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 당선인(정읍·고창)의 36년간의 행정 경험 노하우 전수 및 보유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읍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울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정읍 시민들과 새암로 상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성과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정읍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6일, 정읍시 '도시재생 새암로 사업' 추진을 위해 윤 당선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청 전문가 강진동 교통계획 박사를 초청, 정읍시 관계자와 새암로 상인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 후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며, 서울시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정읍시와 새암로 상인들간의 긴밀한

협조와 서로를 믿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서울시에서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노하우를 전수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지역을 위해 공직 36년간의 행정 경험 노하우 전수 및 보유한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벤트 전문가 컨설팅을 주관한 윤 당선인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을 역임한 행정전문가의 경험을 살려, 정읍·고창의 목은 현안을 해결하는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사개특위 사보임 과정 정당”

현재,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권한쟁의 심판서

지나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상임위 아중) 과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27일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이 사건 개선(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선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오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것으로서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자의적인 강제사임에 해당해 자유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격렬했던 지난해 4월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위원인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오 의원과 바른미래당 내 사보임 반대파 인사 등은 격렬히 반대했고, 결재권을 가진 문 의장과 의원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문 의장의 결재가 이뤄지면서 오 의원은 체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에 오 의원은 현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